

세수증대를 통한 재정적자 축소 시도

재정적자 보전에 따른 공공채무 증가

- 필리핀의 정부재정은 만성적 적자기조에 있으며 2002년에는 GDP 대비 5.4%에 달하는 2,138억 페소의 적자를 기록하여 최고의 적자 수준을 보였음. 2003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출 억제 등을 통해 적자 폭이 다소 축소되기 시작하였음¹⁾.
- 이 나라의 재정상태가 이처럼 악화된 배경은 정부부문의 방만한 재정운영, 국영전력공사(National Power Corporation: Napocor), 국영은행(Philippine National Bank) 등 국영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누적 손실, 부실한 세제 등에 기인함.

최근 재정수지의 변화 추이

단위: 10억 페소, %

	2001	2002	2003	2004 ^e	2005 ^f
수입	562.9	566.2	627.8	698.0	748.7
지출	711.8	780.0	825.6	881.9	920.3
수지	-148.9	-213.8	-197.8	-183.9	-171.6
수지/GDP	-4.1	-5.4	-4.6	-3.9	-3.3

자료: EIU viewswire(2005. 2. 1)에 의거 재작성

- 2004년에는 재정지출 증가율이 전년보다도 상승하였으나, 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수기반 확대 및 관세수입 증가로 재정수입이 당초 목표치를 3.2%를 상회하는 6,980억 페소를 기록하여²⁾, 재정수지 적자가 약 140억 페소 감소할 정도로 개선되었음.

1) 재정지출 증가율: 2002년 9.6%, 2003년 5.8%, 2004년 6.8%, 특히 정부부문의 공격투자지출이 1998년의 경우 GDP 대비 5.5%였으나, 2003년에는 4.2%로 축소되었음.

2) 재정수입 증가율: 2002년 5.8%, 2003년 10.8%, 2004년 11.2%.

-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공공부문의 채무가 누증되어 2003년 총 공공채무 규모가 GDP 대비 135.6%에 달하였으며, 2004년에도 GDP의 5.5%에 해당되는 2,570억 페소의 공공채무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경제규모의 최근 5년 변화 추이

단위: 10억 페소, %

	2001	2002	2003	2004 ^e	2005 ^f
경상 GDP 규모	3,631.5	3,959.6	4,299.9	4,716.4	5,199.6
실질 GDP 성장률	1.8	4.3	4.7	6.2	4.8

자료: EIU viewswire(2005. 2. 1)

- 한편 2004년 기준 총공공채무의 대 GDP 비중이 129.1%로 산출되어 2003년과 비교하여 다소 감소한 것은 2004년의 경제규모 확대가 여타 연도에 비해 가장 컸기 때문이며, 공공채무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높다 하겠음.
- 또한 2005년의 경우 재정적자 보전과 관련하여 약 40억 달러 (226억 페소)의 해외차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국제금리가 인상될 경우 이 나라의 외채상환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임.

조세제도의 개혁으로 세수증대 기대

- 필리핀 정부는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성적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수증대에 정부정책 추진의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2004년 10월 세제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의한 재정안정화 계획을 발표하였음.
- 동 재정안정화 계획에 의하면 조세제도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을 때 매년 800억 페소의 추가 재정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음.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8개 관련법 정비작업을 완료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단기에 재정수입 확대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임.

- 8개 관련법 중에서 주류 및 담배의 물품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이 2004년 12월, 그리고 징세 효율법이 2005년 1월 의회에서 가결되었음. 그러나 연체세금 탕감법 및 투자 인센티브 합리화법은 2004년 12월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아직도 상원에서 대기 상태에 있음.
-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 법안³⁾ 및 면세대상 축소 법안도 지난 2월 말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으로 전달되었음. 그러나 상원에서는 신부가세법안이 기업소득세를 32%에서 35%로 인상하고 개인소득세는 인하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법안의 체계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세율체계에 대해서도 시행상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따라서 신부가세법안에 대한 상원의 심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초의 시행 예정 시기인 2005년 6월 이전에 동법안의 상원 통과는 불가능해질 수도 있음.
- 일곱 번째의 소득세법 개정안⁴⁾과 여덟 번째 통신독점망세법안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 측에서 하원에 관련 법안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임.

3) 최고 부가세율은 10%에서 12%로 인상, 전기 및 유류제품에 대한 부가세율은 법시행 1차년 4%, 2차년 6%, 3차년 8%, 4차년 12%로 인상, 기초 식품류는 국내산일 경우 6% 수입품일 경우 8%의 부가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율체계가 다단계로 구성되어 실제 시행에서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

4) 세금부과 대상 소득의 산출과정을 순액제에서 총액제로 변경하는 법안.

5) 통신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신에 독점망세(franchise tax)를 부과하는 법안.

연초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재정수입

- 2005년 1월의 총재정수입이 643억 페소를 기록하여 1/4분기 목표치 1,630억 페소의 약 40%를 이미 달성하였으며, 특히 세수가 총재정수입의 65.3%에 달하는 420억 페소로서 목표대비 15%를 초과하는 실적을 나타냈음.
- 동일 기간의 관세수입이 목표대비 10.3%를 초과하는 106억 페소에 이르렀으며, 여타 재정수입도 목표치의 두 배에 해당하는 117억 페소를 기록하였음.
- 재정수입의 호조 배경으로는 담배 및 주류의 물품세율 인상, 조세징수의 효율성 제고 등의 영향을 지적할 수 있겠으나, 금융기관의 총수입세⁶⁾, 수입인지세, 개인소득세 및 기업소득세 등의 세수가 예상보다 증가한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2005년 1월에도 808억 페소의 재정지출이 발생하여 165억 페소의 재정적자를 보였음. 그러나 재정수지의 예상 적자수준보다는 약 21%가 낮은 것으로 확인됨.

부장대우겸 수석조사역 정 동 식

(☎3779-6664)

E-mail : kdchung@koreaexim.go.kr

6) 2004년 3월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제도가 부가가치세제에서 총수입세제로 변경되었음.